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바꿔 정치!

#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 대회 해설집



# 에너지 전환대회, 왜 하나요?

##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그리고 국내 핵 정책〉

- 오는 2024년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이 됩니다. 당시 핵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핵사고로 인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여전히 우리 바다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사고를 교훈삼아 탈핵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행사를 지속해왔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때로는 축제처럼, 때로는 퍼레이드로, 때로는 행진으로 우리의 행동을 모았습니다.
- 13년이 지난 2024년의 한국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을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두 기의 신규 건설은 물론이고, 이제는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조차도 핵 산업계를 위해서라면 쉽게 용인해 버리고 맙니다.
- 핵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핵 위험만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에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는 줄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자원 역시 줄어들습니다. 게다가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에 기대어 지금의 기후행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 〈후퇴하는 에너지정책〉

-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만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에너지기본권조차 기업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발전 공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민간 기업 투자 유치로만 해결하게 되면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 게다가 석탄발전 폐쇄 계획과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노력은 전무합니다. 2025년부터는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등의 석탄발전소 20기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은 그간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정의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정의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에너지기본권 등 전반적인 기후 대응정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과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은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민영화 중심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선언〉

- 이에 2024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선언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 특히 그동안 각각의 개별로 내어왔던 주요한 에너지 의제에 대해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의제와 시민들의 힘을 연결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주요 의제 / 슬로건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에너지 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 우리의 목소리\_ 핵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 1. 핵 진흥 정책이 폭주하고 있다.

“핵발전 세 배 확대”.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약속입니다. 참여국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3배와 에너지효율 2배 확대”를 약속할 때 한국 정부는 핵발전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시하고, 탄소중립 모델로 홍보하며 수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COP28에서 기후정의의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만 하더라도 무려 13차례의 해외 순방을 다니며 한국의 핵발전 판매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발전과 SMR 수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 핵 산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핵 위험에 한국 정부가 앞장선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듯 보이지만, 사실상 핵발전 수출은 결국 국내 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핵발전 수출은 ‘국내 핵산업 기술과 안정적인 핵발전 운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내에서는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노후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고, 임시 핵폐기장도 추가 건설하는 일이 당연한 듯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나 기후 재난 예산은 줄이면서, 핵산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이 중 하나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핵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 2. 세계적 흐름과는 다른, 한국 핵발전 현황

한국에는 현재 총 26기이며 영구정지 2기, 건설 중 2기, 건설 예정 2기를 포함하면 총 32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핵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리핵발전소 2·3·4호기, 한빛핵발전소 1·2호기, 한울핵발전소 1·2호기 등 7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 신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울핵발전소 3·4호기 신규 건설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핵발전소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6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핵폐기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은 다릅니다. 2023년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이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2002년에 438기였지만, 2023년에는 407기로 줄었으며, 지금도 새로 가동되는 원자보다 영구 폐쇄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 우리의 목소리\_ 핵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 3. 핵 진흥 폭주를 막아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 진흥만 바라보는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핵발전소를 짓는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석탄 발전을 멈추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투자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핵발전만 바라보는 동안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며, 또 기후위기는 얼마나 심각해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핵발전은 방사능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 핵폐기물이라는 거대한 숙제, 초고압 송전탑의 눈물,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로지 '탄소'를 줄인다는 허울로 모든 부정의를 덮어버리는 핵발전, 핵발전 확대 말고는 지금 당장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 심지어 탄소중립을 핑계로 위험을 수출하려는 핵산업계. 온실가스와 기후 재난을 방사능과 핵 재난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닙니다. 탈핵은 단순히 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 1. 13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의 산물, 핵오염수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후 약 5일간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무려 77경 베크렐로 추정됩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을 막기 위해 퍼부은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나가면서 약 한 달 간 1경 5천조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3년 8~11월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했고, 2024년 2월 말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일년 간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를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약 30년~40년으로 정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녹아내린 핵연료 880톤을 제거하기 전까지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능력이 없고, 여전히 매일 약 9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세계를 향한 핵테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 2. 윤석열 정부와 핵오염수

그러나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2013년 오염수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버려진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버려졌지만 환경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투기를 막기는 커녕 지난 8월 방류 전에는 오히려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빨리 방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염수 해양투기가 진행되면서 바다는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65% 이상이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과는 달리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짓 선동을 치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목소리\_ 핵오염수 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로!

## 3. 생명의 바다, 안전한 먹거리, 탈핵이 답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핵발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또 핵산업계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던 '관행'이 없었다면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또 핵산업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처리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618명이 방사능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한수원은 책임이 없다고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준치 이하인 핵오염수도 위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면 이 판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오염수 투기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진심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핵발전의 안전 신화에 큰 파열음을 낸 것처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역시 핵발전 안전 신화에 위협이 됩니다. '탄소 감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핵발전은 사실 생명의 바다까지도 위협하는 수단입니다. 바다로 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는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함께합니다.

# 우리의 목소리\_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 1. 탈석탄은 국제사회의 요구, 그러나 한국은 신규 건설

지난 해 열린 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탈화석연료 전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3배로 늘리는 것과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한 빨리 퇴출하는 것도 함께 담겼습니다. 물론 초안에 있었던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빠지고 '단계적 감축'으로 변경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그들만의 리그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조차도 매우 진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에는 올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신규 건설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또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아랑곳 않고 결국 건설을 해 놓은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무려 2053년이 되어야 폐쇄될 예정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계획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리협정이 발효된 2016년 이후에도 한국은 석탄발전소를 짓는 데 약 17조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서천과 고성, 강릉, 그리고 삼척의 7기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입니다.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새로 짓는 모순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은 처음으로 국제 시민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을 받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 우리의 목소리\_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 2. 석탄 발전 폐쇄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과는 다른 한축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총 59기 중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가 받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직접 창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산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종합적인 실태와 영향조차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국회가 만든 산업전환법조차도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불안과 절망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 우리의 목소리\_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 3.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산업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산업이나 지역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 특정 계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해보면 탈석탄을 이루는 과정에서 석탄 노동자들이나 석탄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 발전 폐쇄에 따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논의 과정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외치고 요구할 때 정치가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 1. 윤석열 정부의 '친핵'행보

윤석열 정부가 연일 '친핵'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친핵'의 명분과 정당성은 다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호명되는 한편, 에너지위기 와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에너지안보를 지키는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원으로 호명되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난 일로 여겨졌던 후쿠시마 핵사고는 새로운 재앙의 형태로 다시 생태계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도쿄전력이 지불한 사고비용은 현재에 이르러 5배로 증가해 212조에 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배상금 금액의 규모만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발전이 값싸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핵발전을 두고 '에너지안보'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자 기만이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 2. 기후위기 시대, 탈핵사회의 구체적 대안은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기후위기는 고탄소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으로 지구생태계의 한계가 무너질 지경에 이른 오늘날을 설명할 순 없을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값싸게 생산하고 소비해온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과 성장에 골몰한 채 지구 생태계를 채굴하고, 도구적으로 착취해왔습니다. 핵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생태계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 중심의 에너지체제를 유지해왔던 점에서 화석연료와 핵발전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틈타 다시금 정부가 핵발전을 강화하는 오늘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위기를 초래하는 에너지체제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낼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분명한 대안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 3. 왜 공공/시민주도인가?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시장과 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시장 민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국가중심의 투자계획 없이 자생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경쟁 효과 역시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분절되고 시장화 된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공공이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지금 보다 직접적이기 때문에 더 빠른 기후위기 대응의 경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더 공공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간 에너지를 사유화 해온 역사가 지구와 시민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민을 담보로, 생태계와 생명을 담보로 성장해서 이윤을 갈취해왔던 에너지 사유화의 역사를 멈추시다. 핵재앙이 아닌 안전한 사회로, 기후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로! 공공/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실현합시다.



# 우리의 목소리\_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 1. 윤석열 정부에 민영화가 돌아왔다

지난 한 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증가'였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력 시장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이나 방만 경영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한전 사장조차 신년회에서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혁신을 미뤘다며 KT와 포스코, 이탈리아 ENEL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두 기업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대표적 기업이고 전력회사인 ENEL사 역시 1999년 민영화되었습니다.

전력 산업 민영화는 한두해 문제가 아닙니다. 1999년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한전의 발전-송전-배전-판매 사업을 나누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나뉘고 민간 발전 회사가 들어온 것도 그 때입니다. 하지만, 발전·철도·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과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 등으로 해외 매각을 포함한 더 이상의 전력산업 개편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자유화와 한전 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다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 2. 이미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한 지분매각과 같은 형태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사실상 전력 판매 부분이나 송전 분야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으로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송전 분야를 민영화하면 한전은 전력망 사용 비용을 그 기업에 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전 부문의 민영화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공적 소유를 민간 소유로 바꾸는 형태는 아닐지라도 발전공기업의 신규 사업은 허가하지 않고 민간 발전 사업을 허가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유도하면서 민간 발전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5년 98.7%였던 공기업 발전 비중은 계속 낮아져 2023년에는 68.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은 90% 이상이 민간 발전사이고, 앞으로 발전공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이 축소되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기업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문제는 바로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입니다.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기본적인 물량을 비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민간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에너지 위기에 민간 가스 발전사들은 초과 이익을 얻고 그 비용은 가스공사와 한전으로 전가되어 공기업 부실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이 지난 해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횡재'라 불릴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가스 발전 중심인 민간 기업이 전기요금 구조나 가스 수입 방식 등을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 3. 왜 에너지공공성인가

에너지 민영화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한전 사장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예를 든 이탈리아 전력회사인 ENEL사가 1999년 민영화된 이후 이탈리아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EU 국가 중 네 번째로 비싸졌습니다. 영국도 전력을 민영화하면서 전력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위기조차 민간기업에게는 이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의 공공적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목소리\_ 바꾸자 에너지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 1. 기후위기는 모든 걸 바꾼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5도 목표'를 정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지만,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단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이란 표현을 지구열탕화(Global Boiling)란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홍수와 산불, 흑한,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벌어졌고, 이로 인한 식량과 주거 문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과정에서도 고용과 지역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량 생산과 소비, 무한 성장 중심의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_ 바꾸자 에너지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 2. 22대 국회 임기(2024~2028년),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의 골든타임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수십 년 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몇 년 뒤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세울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으로 설정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느슨하고 부족하고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은 부실합니다. 작년 확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은 차기 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산업계에 면죄부를 주며, 핵발전과 CCUS, 국제감축과 같이 실효성과 기후정의 원칙 모두에 위배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점차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날로 커지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기후 불평등이 더해져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올해 4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22대 국회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2024~2028년) 임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은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핵발전만 앞세우는 정책을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간 많은 정치인이 ‘기후’와 ‘환경’을 외쳤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해 ‘그린워싱’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22대 국회는 말 잔치가 아니라, 기후 정의 문제를 정치 전면에 내세울 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 우리의 목소리\_ 바꾸자 에너지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 3. 정책 평가를 넘어 '기후시민의 정치세력화'로

이제는 기후가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기후정치인 '툭' 튀어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뛰어난 한두 명의 활동가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기후정치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염원하는 이들의 힘이 단단하게 조직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후정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지금 당장의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기존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평가나 질의 등을 넘어 이제는 기후정치를 염원하는 이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흐름은 올해 총선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지방선거와 이후 대통령 선거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흐름을 2024년 총선부터 함께 만들어갑시다.

# 에너지 전환대회,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청계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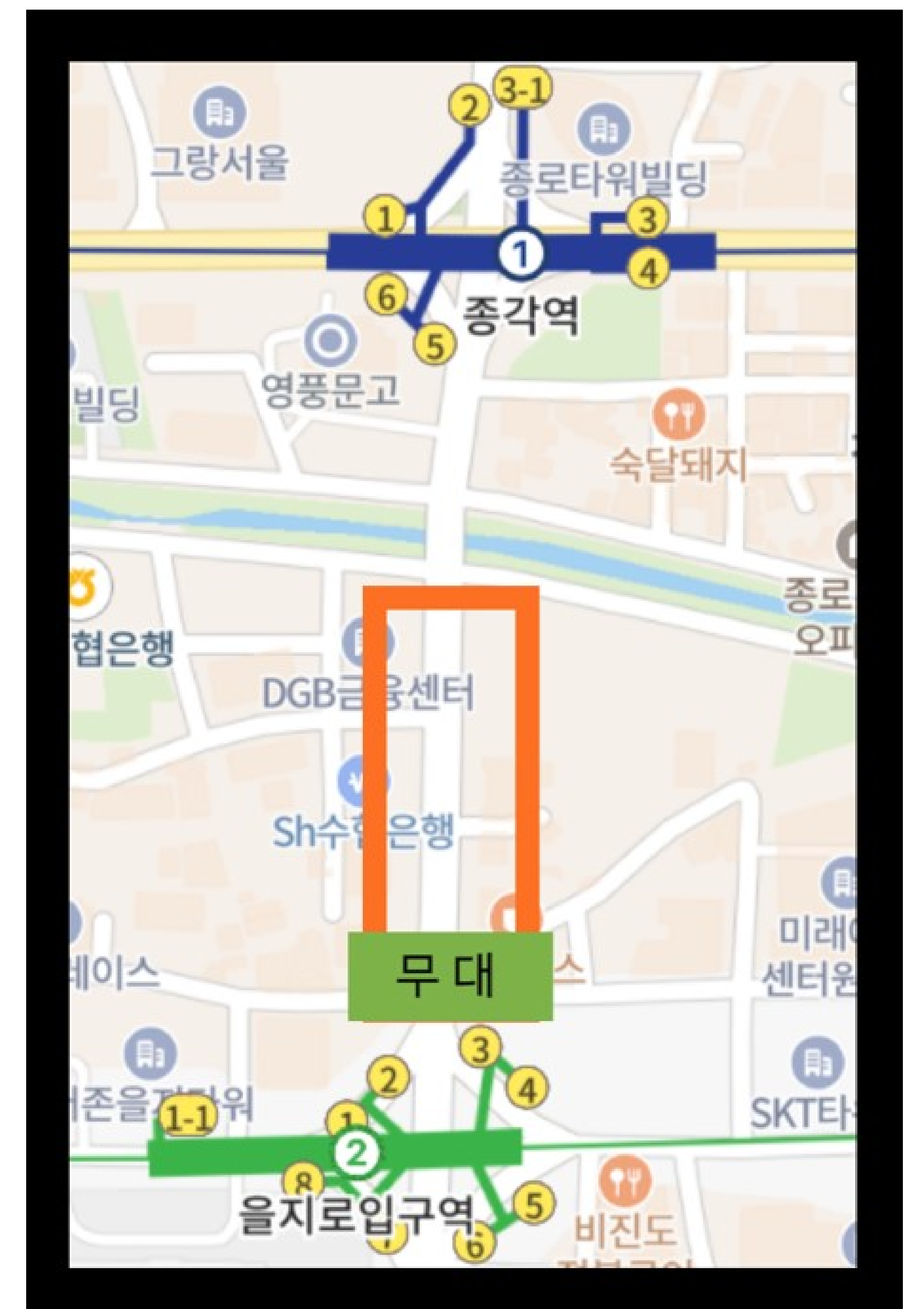
## 세부프로그램

### 2:00-3:30 부스운영

(6개 의제별 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운영됩니다.  
먹거리 부스 이용을 위해 텀블러와 용기를 챙겨 주세요)

### 3:00-4:30 보이는 라디오

“지금, 에너지전환이어야 하는 나의 이유” 사연신청!  
<https://bit.ly/316대회사연모집>



사연 남기러 가기!

〈사연예시〉 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작년부터 부쩍 화가 많아지셨어요. 퇴직 후 삶을 준비하려고 태양광발전과 버섯 농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버섯 농장 건물을 올리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가족들이 함께 목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정권과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전에 없던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네요.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예상했던 지원금도 안 나오고, 투자한 비용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심지어 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매일 핵발전소 이야기만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매일 그렇게 목을 하시네요.

### 4:30-5:00 선언대회

- 6개 의제를 담은 선언문 발표
- 에너지전환대회의 의제에 동의하는 정당 및 후보 발언
- 공동 퍼포먼스 : 자신의 선언을 담은 피켓을 만들어 와주세요.

# 개인추진위원과 참가단체로 함께 해주세요!

3월 16일, 탈핵과 기후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총선을 요구하고 선언하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년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핵,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개인 추진위원의 역할:**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대회 당일 참석합니다.
- **참가단체의 역할:** 10만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단체 회원들과 대회 당일 적극 참여합니다.
- **참가링크:** [https://bit.ly/change\\_316](https://bit.ly/change_316)



- **분담금 및 후원 납부 계좌:**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송금시 '316(단체명), 316(개인명)으로 입력 바랍니다. (예, 316홍길동)
- **문의:** nonuke2022@gmail.com